

기후변화 대응으로 농촌 재구조화 쌀 산업 개편·규제완화 지속 성장

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 전략' 산업·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전환 신규 재배지 발굴·생산단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소멸 막을 것"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규 적정 재배지를 모색하고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실시해 농촌활력 증대에 나선다. 또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쌀 산업을 개편하고 각 지자체의 자율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을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상기후·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는 한편,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지역 주도로 공간 재구조화와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와 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적용해 인구·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주 발생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월 한 청년 농업인의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재해에 대응, 예방시설 확대로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또, 디지털 정밀육종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상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재배·사양기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성장·확산을 위해서는 입지·산업 등 규제를 완화한다.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자재 표준화 및 스마트농업관리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으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솔루션(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한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 완화(조합원 5인 이상 → 3인),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우수·성실 계절근로자 대상 전자비자 도입, 최소 근로일수를 주당 근로시간(35시간)으로 탄력 적용) 등으로 농업

법인을 활성화한다.

쌀 산업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하여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 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계획이다.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씨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를 개편하고, 고품질 품종,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며 다수확 품종을 축소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139개 시군)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탄소중립 위한 환경기술에 390억 투입

환경부, '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정부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총 390억원 규모의 신규 과제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202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순환 경제 신성장 동력화 ▲환경보전 및 화학 안전망 구축 등 4대 중점영역에서 총 2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원금 39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기술 개발' 등 4개 과제에 11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수 저류담 관리 기술개발' 등 6개 과제에 90억원을 지원한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개발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및 제조 유통순환 기술' 등 4개 과제에 78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보전 및 화학 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무인기·센서 기술 기반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망 기술개발'과 '생활화학 제품 함유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등 8개 과제에 104억원을 지원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2025년 2월에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3월까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비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신규 과제를 확정 후 4월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최첨단 녹색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확대 개정 권고

권익위, 장애인 실질적 이동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 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의 차량 등에도 예외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제주도에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등록(신규·변경·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의 차량이어야 한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성년이라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해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의 개선을 제주도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단독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차량도 차고지증명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포함됐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저소득층 10명 중 7명 빈곤 탈출 못했다

통계청,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저소득층의 69.1%, 1분위 소득 유지 청년층, 저소득 탈출 비율 가장 높아

지난 2021년 기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2022년에도 저소득층에 계속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국민 중 대부분은 고소득층을 유지했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및 국제성 소득자료와 연계해 올해 처음 공표됐다. 6년간 같은 사람의 소득이 상향이동 또는 하향이동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2021년에 소득 1분위(하위 20%) 가운데 30.9%는 2022년에 1분위를 벗어났다. 나머지 69.1%는 1분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상위 20%인 5분위 유지율은 86.0%로 1분위에 비해 높았다. 고소득층이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게 상대적으로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이 18일 세종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1분위에 머문 비중은 2020년 한해 감소한 이후 점차 증가해 70%에 육박했다. 2017년 소득 1분위에 속한 사람 10명 중 7명은 2022년까지 1분위를 탈출했다. 3명은 지속적으로 1분위 유지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남자의 1분위 지속기간 비율이 가장 빨리

감소했다.

소득 금액의 증감을 나타내는 절대적 이동성을 보면, 2022년 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상승한 사람은 64.4%로 하락한 사람(32.9%)보다 많았다.

구간별로는 10% 미만 상승한 사람이 22.0%로 가장 많았다. 2022년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청년층이 68.1%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중장년층 63.8%, 노년층 52.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소득금액이 50% 이상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10% 미만 상승한 사람의 비율이 많았다.

시도별로 보면 2022년 기준 소득이 상향이동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인천, 제주, 경기였다. 낮은 지역은 세종, 전남, 전북으로 나타났다. 2022년 소득분위별 이동비율을 보면 2분위가 50.1%로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21.3%는 1분위로 떨어졌고, 28.8%는 3분위 이상으로 상승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AI로 엘리베이터 범죄 감시한다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또 로봇을 이용해 자동으로 전기차 충전·주차·출고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31건을 포함해 총 78건을 승인했다.

㈜유니원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공동주택 승강기 내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1층 승강기홀 모니터링 화면과 방재실에 송출하고, AI 기술로 승강기 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대응

을 돕는 시스템이다.

삼중테크(주)와 ㈜로엔에프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로봇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역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로봇을 활용해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식 주차시스템이다. 또 룰루메디 등 3개사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출국자에 대해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 정부는 암모니아를 열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청정 암모니아 열분해 수소추출설비'(E1 컨소시엄), 개인소유 유류 캠핑카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엘리스캠핑카 등 3개사) 등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